

목 차

■ ■ | 201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간담회

I. 회의개요	1
II.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열린 회의	2
III. 대표의제	3
1.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2.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	
3.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효율성 강화	
4.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5. 원활한 시설 운영	
IV. 내부변화제안 및 종사자 제안	9
V. 접수의견(종합)	1 1

201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간담회

- ◎ 일 시 : 2013년 07월 03일(수) 10:00
- ◎ 장 소 : 서울시민청 태평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정책개발부)

201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간담회

사회복지 현장의 운영자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회의개요

☐ 일 시: 2013년 07월 03일(수) 10:00

☐ 참석대상: 서울특별시 사회복지법인/기관 대표(또는 대리인)

☐ 장 소: 서울시민청 태평홀

☐ 내 용

○ 제안의견에 대한 대표 의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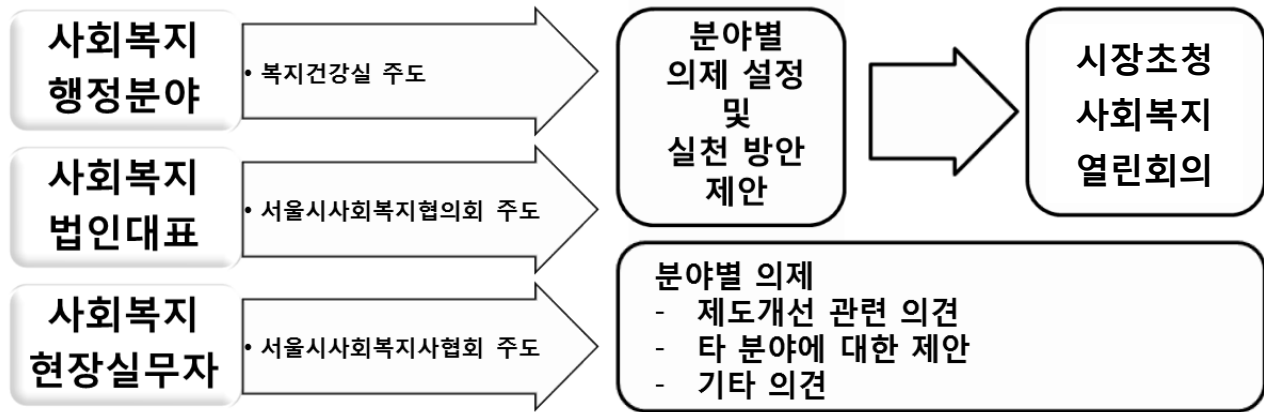
○ 의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의견 수렴

○ 향후추진일정 논의

☐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소요시간 (분)	내 용
접수	~10:00		■ 진행: 홍기은 사무총장
개회사	10:00~10:05	5	■ 황용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대표의제발표	10:05~10:15	10	■ 좌장: 이준영 서울시립대 교수 - 대표의제에 대한 참가자 의견 수렴 - 최종의제선정 및 향후 일정 논의
의견 수렴	10:15~11:35	80	
최종의제선정	11:35~12:00	25	

1. 개괄 진행도



2. 추진방향

- 분야별 의제 설정을 통한 개선 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시장 참석 하에 오픈 컨퍼런스 진행
- 복지거버넌스 협약 체결 및 이행 선언을 통한 변화 노력 및 협력

3. 추진현황

일정	내용
4월 18일	사회복지 열린 회의 제안 제출
4월 22일~24일	추진준비단 1차 회의 및 추진방안 공유
4월 25일	사회복지 열린 회의 추진계획 공개
5월 15일~6월 7일	사회복지운영자 의견 접수
6월 14일	추진준비단 2차 회의 및 추진경과 공유
6월 14일~6월 26일	사회복지운영자 2차 의견 접수(찬반의견/기타의견)
7월 3일	사회복지운영자 간담회(사회복지협의회 정책위원 주재)
7월	간담회의 의견정리 • 열린회의 준비
8월	시장초청 사회복지 열린회의

본 의제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1차(5월 15일~6월 7일) 접수한 사회복지운영자 의견을 토대로 2차(6월 14일~6월 26일)로 의견을, 열린회의의 의제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대표의제는 다음과 같음.

- 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 나.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
- 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효율성 강화
- 라.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 마. 원활한 시설운영

1.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 새로운 시책(제도개선) 복지현장 부적응 최소화

-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민간복지시설의 실질적 사전의견 청취
- 필요시 시범사업 실시로 기존 관련법규 충돌 여부 등 검증·예방

2) 자치구별 복지행정 운영체계 일원화

- 각 구별로 요구하는 자료의 양식이 달라 행정 낭비 발생
- 사업지침 해석에 대한 기준이 달라 일선 현장 혼란 초래

3) 시설평가지표 개선

- 평가주체 통일, 평가지표의 일원화, 간소화, 사전공지 요망

4) 복지담당 공무원 인사 안정성 확보(최소 근무연한 설정 등)

-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비연속성·비전문성 발생

※ 반대: 1개법인, 내용 미기록

5) 법인산하시설 규제 완화

- 복지수요에 맞추어 기존 시설의 기능전환이 용이하도록 제언(아동→노인·장애인 등)

6) 민관 파트너십 강화

- 업무하달관계에서 상호존중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 지침 필요
- 운영비 보조금 지급시기 준수(분기별 보조금 분기 전에 지급)

7) 분기별로 개최되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상시 개최 건의

- 기관의 이사후보 추천/재추천 시 사회복지위원회의 개최시기까지 처리가 유보됨

2.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

1) 자치구별 위탁관련 행정 통일

- 자치구별로 위탁계약내용, 행정서식, 위탁기간이 달라 혼선 초래
- 위탁기간 5년 통일 제도화 (미준수 자치구에 대한 조치방안)

2) 고용승계조건 강화 및 경영진 연봉제 도입

- 경영평가에 의한 경영진의 연봉제 급여책정 도입 필요
- 부실운영시설의 법인변경 시 경영진인 부장은 고용승계에서 제외
 - ※ 반대: 4개 법인, 부장을 경영진에 포함하기 어려움, 경영평가의 합리성 부족

3) 시설위탁 최소자격기준 마련

- 위탁능력이 부족한 협동조합, 사단법인의 검증 필요
 - ※ 반대: 1개 법인, '의견 4)'와 상충

4) 위탁심사 시 자부담 평가비중 하향

- 자부담 평가비중이 높아 인력·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약화
 - ※ 반대: 2개 법인, '의견 3)'와 상충

3.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효율성 강화

1) 법인 등기부 자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현실화

- 현행 등록면허세(재산가액의 1천분의 2)는 자산액이 증가하더라도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법인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2) 재단 기금 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

- 법인 자산의 주식 또는 펀드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반대: 3개 법인, 기금 수익성 악화 위험, 이사회 의사결정 투자 압력 등

3) 시설잉여금의 전입, 적립 허가

- 시설의 토지매입, 건축은 법인전입금으로 부담하지만, 이에 따른 잉여금을 전입, 적립하지 못하게 하여 법인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옴.

4) 명목상 법인의 합병, 해산제도 마련

- 기능을 상실한 법인의 해산시 법인의 전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 이유로 명목상 법인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통해 합병, 해산 방법 마련
※ 해산 시, 심사를 통해 오랫동안 사회적 기여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 도입 등 정리기회 부여

5) 법인 이사회 운영의 현실화

- 종교계 법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적합한 외부추천이사 참여 필요
- 법인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외부추천이사 비율 하향 필요
-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선정기준이 모호한 외부추천이사 응시자격의 강화
※ 반대: 9개 법인, 반대내용 미기록

6) 비지정 후원금의 운영비 사용규제(현행 30%)완화

- ※ 반대: 1개 법인, 반대내용 미 기록

7) 법인운영지원 건의

- 법인운영 담당자의 교육 및 업무 매뉴얼 공유 등 업무지원
※ 반대: 1개 법인, 반대 내용 미 기록

8) 사회복지법인 사무국 근무경력 불이익 해소

- 법인 종사자의 경우 근무경력의 80%만 반영

9) 그린벨트 내 사회복지시설의 증·개축 선별적 허용

- ※ 반대: 1개 법인, 반대 내용 미 기록

4.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1)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 서울시 및 국가 정책사업 수행인력 처우개선(디딤돌, 노인일자리사업 등)
- 출산/육아휴직 지원인력센터 설치 및 대체인력 호봉 인정
- 사회복지시설 직원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및 안전에 대한 대안 마련(보험 가입 등)
-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직급, 직책 체계화·시설별 인건비 및 수당 통일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의 합리적 보완

- 생활시설 중간관리자 배치인력 증원 및 행정사무원(시설당 1명) 배치
- 교대근무시설의 근로기준법 준수(1일 3교대 근무)를 위한 인건비 지원
- 소규모시설의 인력공백(교육·휴가 등)을 위한 예비인력 지원

3) 사회복지현장 경력인정기준의 평준화 필요

-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분야 종사자 불이익 발생(80% 인정)

5. 원활한 시설 운영

1)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관 고유업무 조정 필요

※ 반대: 1개 법인, 반대내용 미기록

2) 수년째 지속되는 정책사업은 고유사업으로 지정하여 안정화 도모

-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3) 시립시설과 법인시설의 기능보강비 선정기준 동일 적용

- 시립시설 65점, 법인시설 70점으로 달리 적용 하고 있음

※ 반대: 1개 법인, 반대내용 미기록

4)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

-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사업비) 구분 지원

- 복지관 규모별 지원인력기준 필요

5) 생활시설분야 제도개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시설장 최소자격기준 강화 필요(이용시설 수준)

※ 시설장 겸직금지, 상근 의무 및 유보수화

※ 반대: 1개 법인, 한 건물에 많게는 5명 이상의 시설장 발생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시설 분류 및 처우(분류는 거주시설, 인력기준은 지역사회재활시설) 통일

- 생활시설 간호사, 간병인 인력 추가지원

- 시설장 연장근로 시간 인정 및 연장근로기준 현실화

※ 보건복지부 지침(종사자 40시간, 조리원 64시간)보다 낮게 운영되고 있음

- 복지종사자 구인공고 시, 예외규정 필요

※ 장애인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남녀를 명시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필요

※ 반대: 1개 법인, 반대내용 미기록

-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및 생활시설 실비입소대상 범위제한 삭제

- 생활시설 입소자의 부모 소득상실(은퇴, 사망 등)시, 공공부조혜택 및 지역사회 자원이용 문제로 입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입소를 서울시 지침으로 제한함

- 질병 등에 의한 이용자 격리가 필요한 생활시설 격리병동 지원 필요
- 장애인직접재활시설 법인 운영비 현실화 및 체험홈 인력지원
 - ※ 반대: 1개 법인, 반대내용 미기록
- 근로기준법에 준용된 통상임금 지급범위 확대
 - ※ 반대: 1개 법인, 반대내용 미기록
-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
- 장기요양시설 운영현실화
 -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현실화(직급 등 고려 없이 동일금액은 부당함)
 - ※ 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종사자 기준 통일
 - ※ 후불제에 따른 이용료 체납 대책 마련
 - ※ 생활보호대상자 비급여액 일반입소자 수준으로 현실화
 - ※ 요양시설 평가지표 현실화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가. 내부 변화 제안

- 1) 정책변화 및 다양한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2) 정책안내 및 업무 매뉴얼 보급

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제안

-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2) 담당업무에 대한 책무성과 윤리성 강화

☐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

가. 내부 변화 제안

- 1) 시설위탁운영의 책임성 강화
 - 대리위탁 금지, 법인의 적극적인 운영지원
- 2) 위탁시설에 대한 종교편향 운영 지양

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제안

- 1) 위탁법인 변경에 따른 운영 방침 변화에 적극 협조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효율성 강화

가. 내부 변화 제안

- 1) 예산사용지침 준수 등 철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가진 운영
- 2) 이사회 내실 있는 운영 및 이사회 회의록 상시 공개

□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가. 내부 변화 제안

- 1) 사회복지종사자의 교육기회 보장
-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환경 준수
- 3) 사회복지종사자의 자기개발 장려

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제안

- 1) 적극적인 자기개발 노력
- 2) 교육, 자기개발, 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접수의견(종합)

건의 내용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1	<u>O각종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 진행 시 청문회 및 시범사업 실시</u>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민간복지시설의 의견청취 필요	양재노인종합복지관(기아대책)
1-1	<u>O신규 정책사업과 관련법규 충돌 예방</u> 새로운 정책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의 관련법규와 충돌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함(특히 수익사업의 세무문제 등)	용산노인종합복지관(온누리복지재단)
1-2	<u>O자치단체간 복지행정 통일</u> 자치구의 행정체계가 달라 자료의 양식 변경, 중복된 자료 발생 등 행정낭비가 크게 발생, 특히 일반현황자료, 평가사항 통일 필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외 1개 법인
1-2	<u>O구립시설이 서울시의 지침을 따를 경우 해당 구에 인센티브</u> 서울시와 각 구의 복지관련 지침이 달라 통일 필요	양재노인종합복지관(기아대책)
1-3	<u>O시설평가지표 개선</u> 시설평가의 주체별로 지표가 다르고 제출양식이 달라 평가를 위한 행정력낭비가 지나치게 발생함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외 1개 법인
1-4	<u>O복지담당공무원 인사안정성 확보</u> 타 분야에 비해 복지담당공무원은 인사이동이 잦아 비연속성, 비전문성 발생, 사회복지관련지침의 담당자별 다른 해석으로 행정혼란 발생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외 2개 법인
1-5	<u>O법인 산하 시설 기능전환 규제 완화</u> 복지수요에 맞추어 산하 시설의 기능전환이 용이하도록 제한(ex:아동>노인)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1-6	<u>O민관 파트너십 강화</u> 일방적인 업무하달에서 탈피하여 상호존중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규정, 지침 지도 필요	양재노인종합복지관(기아대책)
1-6	<u>O운영비 보조금 지급시기 준수</u> 분기별 운영비는 반드시 분기전에 지급 필요	서울시장장애인복지시설협회
1-7	<u>O사회복지위원회 상시 개최 건의</u> 기관의 이사후보 추천/재추천 요청에 분기별로 개최되는 사회복지위원회는 처리시간이 최대 3개월까지 유보되는 상황임	한국YWCA복지사업단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

2-1	<p><u>O자치구별 위탁행정 통일</u></p> <p>자치구별로 위탁시 위탁계약내용, 위탁행정양식, 위탁기간이 달라 신청법인에 혼선 야기</p>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1	<p><u>O지역사회재활시설 위탁기간 5년 통일(보건복지부)</u></p> <p>서울특별시 조례는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있지만,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18page에는 3년 이내로 표기되어있음</p>	서대문장애인복지관(한국재활재단)
2-2	<p><u>O고용승계 조건 강화</u></p> <p>부실운영으로 인한 위탁법인 변경시 경영진인 부장은 고용승계에서 제외 필요</p>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2-2	<p><u>O시설 경영진(부장 이상) 연봉제 도입</u></p> <p>경영평가에 의한 급여책정이 가능하도록 연봉제 도입 필요</p>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2-3	<p><u>O시설위탁 최소자격기준 마련</u></p> <p>최소자격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운영능력이 부족한 협동조합, 사단법인이 위탁신청에 난입하게 됨</p>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2-4	<p><u>O위탁심사 자부담 평가비중 하향</u></p> <p>자부담 평가비중이 높아 무리한 자부담 책정 유도, 인력/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약화</p>	신애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효율성 강화

3-1	<p><u>O법인 등기부 자산 등기시 등록면허세 현실화</u>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지방세법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전액면제하고 있지만, 법인 등기부에 자산을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음(재산가액의 1천분의 2).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자산액이 증가하더라도 이에 따른 이익이 증가하지 않으며, 법인청산을 하더라도 잔여자산이 국고에 귀속되므로, 부동산 중심의 증가하는 자산에 대하여 비율제로 납부하는 것은 법인 운영에 큰 부담임. 특히, 80년대 이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신청주의의 등록면허세 부담으로 수십 년간 변경등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이에 따른 권리행사도 못하는 상황(자산 100억 규모의 재단이 등기부등본에는 자산 20만원대로 등록, 법인 신뢰도 하락).</p>	평원재단
3-2	<p><u>O재단 기금 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u> 저금리 시대에 예금만으로 재단 기금을 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주식 또는 펀드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건의함</p>	여송사회복지재단
3-3	<p><u>O시설임여금의 전입, 적립 허가</u> 법인운영시설의 토지매입, 건축은 법인전입금으로 부담하면서, 이로 인한 시설의 잉여금을 전입, 적립을 못하게 하여, 법인운영, 고유사업 활용에 난항을 가져옴</p>	신애복지재단
3-4	<p><u>O명목상 법인의 해산제도 신설</u> 기능을 상실한 법인의 해산시 법인 설립자가 법인의 전재산을 국고에 환수해야 하는 이유로, 법인을 해산하지 못하고 명목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심사를 통해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명목법인의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안</p>	한국사회복지법인 협의회
3-5	<p><u>O공익이사제 개선</u> 종교계 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p>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3-5	<p><u>O외부추천이사 비율 하향 필요</u> 외부추천이사 인원비율을 높인 결과 외부추천이사의 지원자가 부족하여 이사정수를 축소하는 등 부정적 결과 발생</p>	유린보은동산 외 1개소
3-5	<p><u>O외부추천이사 응시자격 강화</u> 응시자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문성 하락</p>	한국YWCA복지사업단
3-6	<p><u>O후원금 사용규제 완화</u> 비지정후원금의 운영비 사용 30%규정에 의해, 법인 운영 및 적극적인 후원활동에 대한 동력 상실, 후원금 사용에 대한 법인의 자율성 향상 필요</p>	한국사회복지법인 협의회
3-7	<p><u>O법인 운영 담당자의 교육 및 매뉴얼 공유 등 업무지원 확대</u></p>	진암사회복지법인 외 1개소
3-7	<p><u>O법인 사무국 운영 지원 필요</u></p>	한마음복지재단
3-8	<p><u>O사회복지법인 사무국 근무경력 통일 인정</u> 법인종사자의 경우 근무경력의 80%만 인정받아 종사자의 불이익을 보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사무국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p>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외 2개소
3-9	<p><u>O그린벨트 내 사회복지시설 증개축 가능하게 관련법 개정</u> 공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필요한 증/개축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예외조항 필요</p>	영락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4-1	<u>O서울시 보조사업 수행인력 처우개선</u>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인건비 기준이 사회복지사와 달라 처우 불이익 발생	용산노인종합복지관(온누리복지재단) 외 1개 법인
4-1	<u>O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아사업 인력 정규직화</u> 국가정책사업의 실무자 정규직 전환 필요	금천노인종합복지관(기쁜우리월드)
4-1	<u>O서울시 사업(희망플러스통장 등) 종사 비정규직 급여체계 정규직과 통일</u>	강동종합사회복지관(광림복지재단)
4-1	<u>O출산/육아휴직 지원인력센터 설치</u>	금천노인종합복지관(기쁜우리월드)
4-1	<u>O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 인정</u> 대체인력의 인건비가 호봉이 인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함.	서울시아동복지협회
4-1	<u>O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u> 사회복지현장인원 정년 70세로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서울시아동복지협회
4-1	<u>O종사자 안전사고 대비 보험 필요</u> 시설 입소자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구상청구 예외) 필요	서울시장래인복지시설협회
4-1	<u>O공무원과 사회복지종사자 채용, 직급 및 직책 통일</u> 사회복지종사자의 직급 및 직책 체계를 공무원과 통일하여 경력직 채용 등에서 체계 확립 필요	애원복지재단
4-1	<u>O민간사회복지종사자에 서울시공무원 복리후생 제공</u> 서울시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복리후생 일부 제공 필요	양재노인종합복지관(기아대책)
4-1	<u>O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승진소요근무 년수표 체계 확립</u>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49page 승진소요근무 년수표 4급 항목에 ‘일반 5년 이상(다만 전문학사의 경우 3년 이상)’이라고 되어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음(급여체계와 관련해서도 현재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급여체계와 다르게 안내되어 있음)	서대문장애인복지관(한국재활재단)
4-1	<u>O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통일</u> 각 시설별로 다른 인건비 지급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영락사회복지재단 외 1개소
4-1	<u>O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전기사 처우개선(연가, 퇴직금)</u> 무료셔틀버스 운전기사에게 연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서대문장애인복지관(한국재활재단)
4-1	<u>O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급체계 개선</u> 사회복지관과 같이 ‘선임직업훈련교사’ 직급 필요	서울시장래인직업재활시설협회
4-1	<u>O사회복지종사자 세분화되고 통일된 경력인정기준 마련</u>	강동종합사회복지관(광림복지재단)
4-1	<u>O교대근무시설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지원 필요</u>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3교대의 직원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부족	서울시장래인복지시설협회 외 1개소
4-2	<u>O생활시설 사무원 시설당 1명 필요</u> 시설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원 지원기준을 시설당 1명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장래인복지시설협회
4-2	<u>O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u> 현행 외상,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추가지원예정인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중증장애인(24시간 케어 필요)에도 추가지원 포함 재고 요청	서울시장래인복지시설협회
4-2	<u>O소규모 시설 인력 지원</u> 소규모시설 종사자는 인원공백이 커서 휴가/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크게 발생함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원활한 시설 운영

5-1	O복지관 고유업무 조정 필요 복지정책의 변화, 이용자욕구 변화에 따른 복지관의 고유업무도 조정이 필요함	용산노인종합복지관(온누리복지재단)
5-2	O경로당활성화사업을 기본(고유)사업으로 지정 수년째 지속되고있는 정책사업은 고유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영안정화 도모	금천노인종합복지관(기쁜우리월드)
5-3	O기능보강비 선정기준 동일적용 시립시설(65점), 법인시설(70점)의 기능보강비 선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유린보은동산
5-4	O노인과 장애인 및 사회복지관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통일 사회복지관은 종사자의 정원도 없이 운영비로 인건비 및 사업비를 통합하여 지급함으로써 운영불균형 발생, 복지관 규모를 고려하여 지급	강동종합사회복지관(광림복지재단)
5-5	O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장 최소자격기준 강화 이용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5-5	O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겸직 금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부설/병설센터의 시설장 겸직 금지 필요	서울시아동복지협회
5-5	O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분류 및 처우 통일 현재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거주시설로 분류하면서, 인력기준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준을 따르게 하여 혼선 발생	서대문장애인복지관(한국재활재단)
5-5	O생활시설 간호사, 간병인 인력 추가지원 입원환자 발생시 업무공백이 발생하며, 무료지원은 제공받기에 어려움이 많음	서울시장장애인복지시설협회
5-5	O연장근로기준 현실화 -시설장 연장근로 시간 인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기준 준수(교대근무자/조리원 64시간, 종사자 40시간)	서울시장장애인복지시설협회
5-5	O구인광고 예외조항 필요 노동법상 남녀 근로자 구분이 불가한 부분에 대하여, 장애인 시설의 경우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남,녀를 명시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서울시장장애인복지시설협회
5-5	O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또는 폐지 성인장애자녀 부모 은퇴, 소득상실의 경우 부양의무 이행 어려우며, 부모사후 형제에게 부양의무 적용 어려움.	서울시장장애인복지시설협회
5-5	O실비입소대상 범위제한 삭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입소시 공공부조혜택이 시설로 귀속되므로 잔여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침. 공공부조혜택 및 지역사회자원 이용 문제로 입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입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지침에도 내용이 없는데 서울시 지침에 기록됨	서울시장장애인복지시설협회
5-5	O생활시설 격리병동 지원 필요 질병 등에 의한 격리를 요하는 이용자를 위한 격리치료시스템 필요	서울시장장애인복지시설협회
5-5	O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현실화	서울시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5-5	O체험흡 인력지원 인력, 운영비 지원이 안되는 체험흡을 시설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서울시장장애인복지시설협회
5-5	O근로기준법에 준용된 통상임금 지급범위 확대	서울시장장애인복지시설협회
5-5	O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 노후된 아동복지시설의 리모델링 및 장비보강 지원(에너지 절감 및 안전확보 등) 및 아동 학습비 지원 인상(삭감된 나우스타트 아동지원금 복구)	서울시아동복지협회
5-5	O요양보호사 전년도 급여에 10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지급 -요양보호사 외의 종사자와 운영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음 -급여를 많이 받는 시설이나 적게 받는 시설이나 일정금액 10만원을 정하여 처우개선비라 한 것은 부당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5-5	O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종사자 기준 통일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인원 1명당 2.5명, 병실당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맞추면 병실당 4명을 맞출 수 없게 됨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5-5	O요양시설 이용어르신들의 이용료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현행 후불제로 되어있는 이용료를 체납한 사람은 장기 체납 후 시설을 옮겨다니며 계속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5-5	O수급대상자 비급여액 현실화 수급대상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했을 경우 비급여 지원기준이 일반입소자보다 적게 됨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5-5	O요양시설 평가지표 변경 필요 환의를 면으로 제작하여 삶아빨고 다림질을 하는 등 최상의 위생상태를 유지해도 평가 상에 마이너스를 받게 됨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내부변화제안 및 종사자 제안

O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변화 및 이용자들의 다양화된 욕구에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O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O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환경 개선 노력	
O종사자 인권보호강령 마련 등 종사자의 인권보호 노력	
O정책 안내 및 업무 매뉴얼 보급	
O예산 사용 지침 준수 등 철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가진 운영	
O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 노력 필요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지위향상을 위한 종사자의 노력 필요	
O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O철저한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성 강화	

201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간담회

발 행 일 2013년 07월 03일
발 행 인 황 용 규
발 행 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편 집 인 홍 기 은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20
전 화 02) 2021-1732
팩 스 02) 771-3357
홈페이지 <http://www.s-win.or.kr>
전자우편 smcsw@hanmail.net
등 록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 있으므로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